

국제회의참가 결과보고서

인권 증진을 위한 선정사례에 관한 세미나
(Seminar on Good Governance Practic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2004. 10.

보고자 : 김은경 법·정치연구부 연구원

1. 회의명 : 인권 증진을 위한 선정 사례에 관한 세미나 (Seminar on Good Governance Practices for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2. 회의 배경 및 목적

- 가. 한국은 유엔 인권위원국으로서 관련 결의안을 2000년 이해 매년 공동 발의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
- 나. 2003년 개최된 제59차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인권과 선정’ 결의안에 따라 금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음.
- 다. 제59차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인권증진에 있어서 선정의 역할’ 결의안 (2003/65)은 관련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2005. 3월 개최 예정인 인권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결정하였음.

3. 회의 장소 및 일정

가. 기간 및 장소 : 2004. 9. 15 - 16. 외교통상부(별관) 3층 국제회의장

나. 일정

일정표	
15일	
08:30 - 09:00	참가자 등록 및 문서 배포
09:00 - 10:45	개회 : 의장 개회사, 환영연설, 기조연설
10:45 - 11:00	휴식
11:00 - 12:00	Panel 1 : 법치의 증진
12:00 - 14:00	점심식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주최
14:00 - 15:15	Panel 1 : 계속
15:15 - 15:30	휴식
15:30 - 17:45	Panel 2 : 인권 실현에 기여하는 서비스 전달의 강화
17:45 - 18:30	첫째 날 정리
리셉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주최
16일	
09:00 - 10:00	Panel 3 : 민주적 제도와 참여의 강화
10:00 - 10:15	휴식
10:15 - 11:30	Panel 3 : 계속
11:30 - 12:00	Panel 3 정리
12:00 - 14:00	점심식사 대한민국 국가위원회 위원장 주최
14:00 - 16:15	Panel 4 :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부패 척결
16:15 - 16:30	휴식
16:30 - 17:00	Panel 4 정리
17:00 - 17:45	Actions for the future
17:45 - 18:30	정리 및 폐회

4. 회의 공식 언어

- 영어, 불어, 스페인어 (3개 언어 동시통역)

5. 회의 주최기관과 회의 형식

가. UN인권고등판무관실(UNHCR), UNDP 한국대표부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공동으로 주최함.

나. 회의방식은 유엔총회의 진행형식으로 이루어졌음. 각 패널별로 Chairperson, Moderator, Rapporteur, 그리고 패널발표자가 연단에 위치하고, 각국 대표들은 소속 국가의 이름이 적힌 자리에서 국가 대표단의 자격으로 발언하는 식으로 진행된 유엔총회 회의형식이었음.

6. 참가자 규모

가. 국외 주요참석자

- Louise Arbour UN인권고등판무관
- M. Cuadros 페루 외무장관
- K. Phavi Ing 캄보디아 여성부장관
- M. Bitamazire 우간다 초등교육부장관
- V. Muntarbhorn UN인권위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나. 국내 주요참석자

- 이선진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 박경서 인권대사
- 백지아 외교통상부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 정진성 UN인권소위 위원, 서울대 교수

다. 국가별 참석자

- 약 200 여명 (각국의 외교부, 대사관, 국무부, 등 공직자 중심)

7. 주요내용

가. 법치주의 증진

- 1) 국제인권규범의 보편적 이행 보장

발표자: 최영준(대한민국)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 전문 위원

국가 인권위의 주요 임무중 하나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 성공적인 예가 최근 만들어진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 법안이다. 이전의 산업연수제도는 짧은 체류기간 동안에 임금과 노동환경의 부적절한 감독으로 인해서 이주 노동자의 심각한 노동착취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를 막기위해서 위원회는 2002년 8월에 처음으로 이주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첫 번째 제안을 했으나 불충분한 자료와 입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거부를 당한다. 따라서 두 번째 제안에서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상황에 대해서 광범위한 조사 연구를 거쳐서 고용허가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적 지위와 권리를 이주 노동자들에게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03년 8월에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의 이행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법안이 통과 되었고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발표자 : Mr. Cristian Correa Montt(칠레) / 정치적 구금과 고문 국가위원회
부집행위원장

Programme of Reparation and Comprehensive Care in the Fields of Health and Human Rights(PRAIS)는 1973년~1990년 사이의 기간동안에 칠레의 군부독재에 의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사회적 보상을 필요로 하는 희생을 겪은 사람들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장 국가정책의 일부로서 이 정책의 법적·윤리적 기초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ruth and Reconciliation)의 제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은 군부로부터의 억압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탄압을 겪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그로 인해서 함께 고통을 겪은 직계가족들이다. 대략 80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수혜자들 중에서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며, 2002년 9월까지 182,000명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있으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도시의 국가 보건 치유 서비스제도에서 일하는 12개의 팀을 통해서 이행이 되는데, 그들은 수혜자들의 재활과 치료를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Inter-American Development Agency에 의해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the Ministry of Health)에 인계되었으며, 매년 2백2십만 페소의 예산을 확보하여 이행되고 있다.

나. 인권실현에 기여하는 서비스 전달의 강화

1) 공공 예산에서의 투명성과 사회복지분야 지출의 증가

발표자 : Mr. Ivan Fernandez(에콰도르) / 사회전선 기술비서

에콰도르는 1990년대 후반에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의 감소를 초래하는 심각한 거시적 경제 공황을 겪었다. 가난은 심해졌고, 보건과 교육에 대한 소비도 25% 정도 감소했다. 이에 유니세프의 후원을 받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의 예산이 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재정정부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사회복지분야를 위한 지출은 채무상환을 위한 배당이나 비사회분야에 비해서 불균형하게 낮았으며, 특정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사회복지 혜택을 적게 받았다. 지난 4년간 유니세프에서 후원하는 여러 사회단체와 정부의 집행부와 입법부는 예산분석을 견고하게 하여 빈곤층에 대한 사회복지비용을 증가시켰고, 사회복지에 대한 의제가 미디어나 노동운동 등 여러 단체를 통해서 공론화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비의 증가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해외채무에 대한 충격과 석유수출에만 의존하는 국가수입, 국가 세금체계의 불공정성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연구되었다. 에콰도르의 정치적 지도자가 시민사회와 함께 국가적 · 지역적으로 이루어진 사회투자 과정의 자취를 추적하기 위해 국가 감시 체계-SIISE를 강화시켰고, 그 결과에 의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국가예산의 투명도와 책임감,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국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결정시에 국민을 참여시키는 것, 정보를 공유하는 것 등을 증가시켰다.

2) 소수민족을 위한 대안적인 기초 교육을 통한 보편적 초등교육

발표자 : H.E. Ms. Namirembe Bitamazire(우간다) / 초등교육부 장관

1997년, 우간다 정부가 보편적 초등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 북서부의 카라모자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등교육을 받는 학생수가 증가하였다. 우간다에서 가장 가난한 카라모자 지역은 여러 종교집단으로 이루어진 반 유목민족

이다. 가축을 따라 유목생활을 하는 남자들을 대신하여 여자와 어린이들이 삶을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카라모자 사람들은 집안 살림에 어린이들이 필요하며 정규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삶에서 필요한 것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프로그램을 거부하였다. 이에 지역사회에 기반 한 비정규 학습 프로그램(ABEK, 카마모자를 위한 대안적 기초교육)을 신설, 정규교육체계와 준유목민족의 라이프스타일 간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ABEK는 카리모자에서 자라거나 카리모종 라이프스타일을 지속해 나갈 아이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과 정규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카리모종 아이들을 장려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융통성 있는 시간표와 지역 환경에 적합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의 모든 실행 단계에 지역사회를 참여시켰다. 그 결과, 기초교육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의 수가 1998년 5,000명에서 2002년 21,000명으로 증가하였고 ABEK 어린이들이 정규교육에 참여하는 수도 꾸준히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50% 이상의 ABEK 어린이들이 문맹에서 벗어나 간단한 수학문제도 풀 수 있게 되었다. 유니세프와 국제개발처의 참여를 얻은 ABEK은 2001년 4개의 지역사회로 확장되었으며 프로그램의 정규교육체계화를 이루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ABEK는 지역 사회와 소수 인종이 어떻게 더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과 보편적 무상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가는 지에 대한 좋은 예가 되고 있다.

다. 민주적 제도와 참여의 강화

1) 노르웨이 원주민(Sami)의 민주적 제도로의 편입

발표자 : Ms. Eva Josefsen(노르웨이) / Sami Parliament 의원

Sami 의회는 1989년 노르웨이의 원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독립 단체로 노르웨이 Sami 의회는 1989년 노르웨이의 원주민들에 의해 설립된 독립 단체로 노르웨이 전체 원주민을 포함하는 13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3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Sami 의회를 설립하는 가장 큰 도전과제는 노르웨이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Sami 문화를 수호할 수 있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합체를 어떻게 이루어내는 가였으며, Sami 의회의 설립으로 Sami 출신의 노르웨이 신민들에게 다른 노르웨이 시민들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동시에 사회의 한 단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또한 Sami 의회는 Sami 주민들에게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을 다루었으며 정치적 발의권 신장과 공중 행정 직무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어

내야 했다. Sami 의회 기관은 Sami 교육, 문화, 언어, 환경, 문화 보호, 경제 개발, 그리고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고, 행정 기구로서 Sami 문화 기금과 개발 기금같은 많은 국가 보조기금 프로그램들을 책임졌다. 이후, Sami 의회는 문화 활동과 교육을 위한 기금 운용의 권한을 부여받고 교육 분야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교육 과정 결정에도 참여하였다. 1999년부터 Sami 의회는 예산의 일부를 집행 받아 우선적으로 배급해야 할 사항에 따라 배당할 총액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Sami 의회는 지금 노르웨이 정치적 삶에 효과적인 정치 단체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으며 Sami 주민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들에 대해 중심적 권위를 지닌 가장 중요한 자문 단체이다. Sami 의회의 설립과 발전, 그리고 업적들은 노르웨이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Sami 의회를 통해 Sami 주민들은 자체적 일상사 관리에 대한 강력한 발언과 공중의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

2) 참여와 입법을 통한 여성의 권리강화(팔레스타인 여성운동단체 중심으로)

발표자 : Ms. Rawya Shawa(팔레스타인) / 팔레스타인 입법위원회 위원

The Woman Affairs Technical Committee(WATC)는 비정부기관으로 여성위원회들을 위한 연합 네트워킹 조직체이다. WATC는 팔레스타인 여성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여러 분야에서의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특별히 여성의 투표와 입법 행위 결정에의 참여 증대에 관심을 가졌다. 1996년 첫 번째 팔레스타인 선거 직후, WATC는 그들의 과업을 시작하였는데 주로 선거에 초점을 둔 것으로 민주적 실행을 촉진시키는 입법 행위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수준에 관한 것이다. 또한 WATC는 여성의 동등성을 촉진시키는 법률과 입법행위를 성취하기 위해 정부와 비 정부조직, 정치단체, 압력단체 지도자 등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법률 전문가와 사회적 성에 대한 조안가들을 모집하여 여성 참여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여러 조직체와 자치 조직들에게 공동 연구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 조직체에 참여하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여성 인원 할당제는 이제 모든 정당의 여성 그룹에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1998년 이래로 60명의 여성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법적 체계 위에서 선거법과 헌법 그리고 가정법에 관한 로비와 네트워킹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 조직과 다른 시민 사회 조직 간의 네트워킹 단체가 인권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고 있다.

라.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부패척결

1) 부패의 예방 : 정보접근권을 통한 투명성과 책임성

발표자 : Mr. Vijay Nayaraj(인도) / NGO단체 MKSS 정치 활동가

공무원들의 예산 기입 조작 등의 비리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제 공과 일자리 창출 등의 주 계획사업들이 종종 실패하였으며 또한, 정부 예산 집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결과를 보고한 보고서에서 조차 약 100개 마을의 개발 지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MKSS(Mazdoor Kisan Shakti Sangathan)는 jan sunwais를 조직하고 공중 청문회를 시작하였다. jan sunwais는 그 지역의 시민, 사회 운동가, 법률가, 언론 종사자 등이 나란히 하는 공개 토론회로 사람들은 질문과 증거를 통해 당국의 보고와 그들의 현실과의 불일치에 대해 지적해 내었다. 또한 부패한 공무원을 공중 앞에 내보여 공적으로 비난받은 공무원들이 횡령한 돈을 반환하게 만들었으며 일부 공무원들은 사직 혹은 휴직당하고 심지어 구속을 당하기도 했다. MKSS는 다른 시민 사회 그룹들과 개인들의 연합을 만들고 사람들의 정보 접근권을 위한 범국민적 캠페인(NCPRI) 형성을 이끌었다. 공중 청문회는 라자스탄의 Panchayati Raj 법을 개정시켜 시민들이 문서 접근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현재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jan sunwais는 이제 MKSS의 감독 하에서 적절한 공중 예산 사용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시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정부의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해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공 기금이 조달되는 등 삶과 생계에 대한 권리의 일부가 되고 있다.

2) 사법제도에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개혁

발표자 : Chief Justice Evans Gicheru(케냐) / 케냐 고등법원 재판장

케냐의 반 부패 개정 의제는 현재 진행중인 헌법 개정 과정의 일부이다. 2004 헌법 초안에 의거, 케냐는 여러 정당의 민주주의, 참여 정부, 투명성과 책임성, 권력의 분배와 위임,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그리고 법의 질서를 통한 좋은 정부의 원칙을 기반으로 케냐 공화국을 설립하였다. 많은 단체들이 부패 제한을 위해 창설되고 개정되었으며 사법부와 제헌부는 부패에 대한 대통령 자문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아 법률상의 정책을 설립하고 법과 법률 분야를 개정하였으며, 2003년 반 부패 계획과 경제 범죄 법에 의해 케냐 반 부패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한편, 사법 제도 개정을 위해 사법부의 부족한 독립성과 효율성, 그리고 권한과 유효성을 재고하고 고등법원 재판장으로부터 사법부의 권력을 분배하는 것이 중요시 되고 있다. 사법부 개정과 발전을 위한 위원회가 고등법원 재판장에 의해 임명되고 청렴과 반 부패를 위한 하위 위원회 정착되었다. 이 같은 개정은 새로운 법 등록관과 고등법원 재판장 임명을 이끌어냈다. 대법원장이 사임한 이래, 42명의 사법부 직원이 부패 혐의로 사직하거나 해고되었으며, 헌법 초안은 사법부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고등법원 재판장의 권력과 역할, 재판관의 임명, 사법부 복지 위원회의 권력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다. 케냐의 2004 뇌물 행위 지표에 의하면 2002년에 비해 부패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며 시민들의 뇌물 비용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 토론내용

가. 노르웨이 원주민(Sami)의 민주적 제도로의 편입

- 1) 원주민과 소수민족으로서 독립적인 의회를 설립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해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함.
- 2) Sami 의회의 주된 활동과 관심이 Sami 언어와 교육, 문화적 전통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음.
- 3) 노르웨이 의회와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원주민·소수민족으로서 독립성과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음.
- 4) Sami 의장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나. 팔레스타인 여성의 참여와 입법을 통한 여성의 권리강화

- 1) 신생정부의 경우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향이 있지만, 의회를 비롯한 국가기구를 민주적으로 설립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중요함.
- 2) 팔레스타인 의회(PLC)를 민주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속에 여성의 참여와 시민의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보임.

- 3) 여성의 의회참여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WATC의 활동 가운데, 단순히 여성의 수에 대한 문제와 여성주의적 의식을 가진 여성의원의 증가문제에 대해 여성운동단체의 고찰에 대한 논의여부에 대한 문제.
- 4) UN에서 권장하는 성 주류화의 의제와 전략이 팔레스타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정책형성에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의.
- 5) 정책의 성 주류화 전략은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의 수준과 여성집단내에서도 주변화되는 소수집단(예를들면 빈곤과 성폭력, 성적 소수자의 문제)의 문제를 주류로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이 있는데, WATC의 활동은 주로 참여의 수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후자에 대한 활동과 팔레스타인 정부내의 현황에 대한 발언을 요청함.

9. 참가자 역할

대한민국 참가자 대표로서 패널 3 (민주적 제도와 참여의 강화)에 대한 토론과 질의를 국가별 발언 순서에서 발표함.

10. 평가 및 제언

가. 각국 정부와 UN 중심의 공식적 세미나로서 민주주의와 good governance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governance를 논의하였음.

나. 세미나의 개최장소가 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없는 비공개 세미나였던 점이 아쉬운 점임.